

신향락 칼럼



이사·주필

“조국의 아이들아. 일어나라! / .../ 폭정에 결연히 맞서서/ 피눈은 깃발을 들 어울려라! / .../ 적은 우리의 아내와 사랑하는 이의/ 목을 조르려 다가오고 있다/ 공격하라, 시민들이여! / .../ 적들의 더러운 피가 넘쳐흐르도록 / ...”

프랑스 국가(國歌) ‘라 마르세예즈’의 가사 일부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합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라라! / ...”

이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잘 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우문(問問)이지만 ‘라 마르세예즈’와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중 어느 것이 더 살벌한가. 이걸 우리 정부에 묻는다 면 뭐라고 대답할까. 굳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내세워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

노란 리본에 쓰인 ‘임을 위한 행진곡’

이다. 가사가 과격하고 살벌해 기념곡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노래란 단순히 음调和 가사의 결합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그것이 불린 시대의 역사,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공유하는 체험까지도 아우르는 총체적 융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마르세예즈’는 1792년 4월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앞두고 공병대 대위 루제드 리슬이 아군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하룻밤 사이 작사·작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억지 내세워 지정 반대

애초 군가(軍歌)로 널리 불렸던 이 노래는 1879년 프랑스 국가로 공식 지정됐으며, 2005년 의회는 국가와 국가를 모욕할 경우 6개월의 구금과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가사에 유혈이 난자한데도 그들은 국가로서 역사성과 가치가 무게를 둔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다시 그 역사에 얽매인다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하거늘 군부독재 시기 민주화운동과 5·18 광주민중항쟁을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두고, ‘살벌’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목숨과 피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국민의 60%이

상이 기념곡 지정에 찬성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는 또 다른 이유도 내세우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종북’(從北)이란단. 기념곡 지정을 관장하는 국가보훈처는 지난 2월 “이 노래가 북한 영화 ‘임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 음악이며 북한 통일노래 100곡 집에 수록됐다”면서 ‘종북몰이’에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보수단체 등은 한 달 전 신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 그들의 입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광고를 내고 대대적인 색깔공세를 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달 8일 국회에서 “강한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자칫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보훈처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앵무새’ 역할을 한 셈이다.

알려진 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과 아학을 이끌다 숨진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1981년 소설가 황석영 씨가 가사를 쓰고, 당시 전남대생 김종률 씨가 곡을 붙여 탄생했다. 북한 영화 ‘남을 위한 교향시’는 1991년 제작됐으니 ‘북한 관련’ 운운은 터무니 없는 왜곡인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종북 노래’라면 5·18이 국가기념일이 된 1997년부터 어떻게 정부 주관 행사에서 공식 제창되고, 역대 대통령이 따라 부를 수 있었는지가.

이런 억지 핑계를 대고 있으니 기념곡 지정은 여전히 하세월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해 6월 여·야 국회의원 162명의 찬성으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보훈처는 지정 절차를 서두르기는커녕, 보수단체와 보훈처 입맛에 맞는 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부정적인 여론을 수렴, 이를 홍보하는 데 치중해 왔다. 각본대로 복되고 장구 친 셈이다.

기본 안 된 반칙 언제까지

그러면서 작사자인 황석영 씨의 방북을 문체 삼고, 일부 노동·진보단체가 의뢰 때 애국가 대신 부른 노래로, 기념곡으로 지정될 경우 또 다른 국론분열을 우려한다고 둘러댔다. 보훈처는 5·18 34주년을 엿새 앞둔 12일 기념곡 지정은 물론 참석자 제장을 거부했다. 그야말로 생떼가 아닐 수 없다. 국가기관마저 치졸한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닌가.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본과 원칙이다. 기본이 안 된 나라, 원칙 없는 사회가 부른 인재(人災)였다. 보훈처와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도 기본을 무시한, 반칙에 있다.

5·18 민주묘역에 내걸린 노란 리본들, 거기에 쓰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픔을 더해 준다.

社說

지방선거 경선 ‘일당 독점’ 폐해 우려된다

막바지에 접어든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전남 지방선거 후보 경선 결과 ‘일당 독점’의 폐해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정치에 걸맞은 공천 혁신과 물갈이를 기대했지만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대부분 후보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 경선에서 서구정당을 제외한 기존 단체장이 모두 후보로 결정되고 지방의원들도 현역이 우세를 보였다. ‘100% 공론조사’의 선거인단 투표율이 낮았던 데다 곳곳에서 조직 동원이 이뤄지면서 조직력에서 강한 현역들이 앞선 것이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도 대부분 ‘100% 여론조사’ 방식이어서 인지도가 높은 현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 와중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내 사람 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후보자 확정 시점이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선거일 한 달 전에 후보자가 정해졌으나 ‘민주계’와 ‘안철수계’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경선이 여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검증 기간과 선택 폭을 그만큼 제한하는 행위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지역에서 ‘기발만 꽃아도 당선 이 가능하다’고 여겨왔던 과거의 무례와 오만을 반박하고 있지 않나 여겨진다. ‘새정치’가 ‘도로 민주당’이 됐다든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개혁공천’을 다집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선 결과를 보면 물갈이는커녕 되레 도를 넘어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로 인한 일당독점 구도는 지역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여론의 다양성과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 남은 공천에서만큼은 혁신의 몸부림이라도 보여 주길 고대한다.

생계 위협 진도 주민들 적극 지원에 나서야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진도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미역 양식장을 덮치는가 하면 뱃길이 막히면서 생필품 공급이 달리고, 관광객이 크게 줄어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진도산 수산물 기피현상’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기름때가 조도와 동·서거차도, 병풍도 등지의 미역 양식장까지 확산되면서 수확은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청정해역에서 자생한 미역, 톳 등 자연산 해조류와 양식장 어류 역시 기름때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출하를 포기한 상태다.

섬지역 뱃길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심각하다. 사고 전 하루 8차례씩 평택항과 조도를 오가던 배들은 사고 직후 마련된 임시 선착장을 통하면 서 운항 횟수가 2~3차례로 대폭 감소했다. 이로 인해 조도 주민 3000여 명은 생필품 공급은 물론 주요 소득원인 농수산물을 내다 팔지 못해 경제적 손

실로 이어지고 있다. 관광업도 타격이 크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운림산방, 관매도 등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은 9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8000여 명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도 지역민들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혹이나 누가 될까 속앓이만 하고 있다. 특히 어민들은 사고 직후부터 줄곧 생업을 미루고 자비까지 들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전남도가 최근 들어 주민들의 여론을 형편을 감안,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섬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부터 실시해야 한다. 당장 어업지도선 등을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다. 또 어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기름 방제작업도 적극 펴야 한다. 아울러 사태가 진정되면 피해 보상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옥영석  
농협중앙회 삼송유통센터팀장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우지만 지원동기는 급여를 섭섭찮게 주기 때문이며, 하고 싶은 일은 후선부서의 지원역할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의 생각은 기성세대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직업선택요인은 1983년이래 안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수입(36.3%)이 안정성(30.4%)을 추월하였고 적성·흥미(11.3%), 장래성(7.8%), 보람·자아성취(7.4%), 명예(3.3%)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외환위기에 최고조에 달한 안정성에 대한 욕구는 이직과 전업 등 직업세계의 변화와 불안정성에 대해 익숙해진만큼 수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음을 의미한다. 적성과 장래성, 성취감, 명예 등 다른 가치를 합한 것(29.8%)보다 비중이 크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돈의 가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유럽국가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에서도 일에 대한 자부심을 직업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자본주의의 중추

국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수입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하고 싶은 일은 후선부서의 지원역할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의 생각은 기성세대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세월호 승무원들의 행태를 보며 직업윤리와 리더십의 부재를 탓하고 있지만 돈이 가장 우선되는 직업가치가 된 사회에서 자신의 일이 고객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신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자부심이 없는 집단이 직장이란 생계를 해결하는 수단일 뿐 팀워크와 소명 의식이 살아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창출이라는 것만해도 그렇다.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듣고 외운 ‘기업의 목적 = 이윤창출’이라는 공식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다. 지속경쟁을 위한 이윤창출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환경과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0여년 전 ‘부자되세요’라는 광고카피가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 시절

만나는 사람마다 “부자되세요”라고 덕담을 건네곤 했는데, 요즘엔 어른이 할 것 없이 “대박나세요”를 외친다. 대박은 노력한 바에 비해 큰 돈을 벌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도박판에서 횡재하였을 때 쓰는 표현이다. 큰 돈을 버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요행으로도 부를 얻으려는 한탕주의에 몰입해 대박을 기원하는 풍경은 누가 봐도 바람직한 사회상은 아니다.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 농부는 겨우내 소중히 보관해온 벼씨를 소독하고 싹을 틔우고 어린 모를 내, 물을 대고, 피를 뽑으며, 새를 쫓고, 베어서 말리는 88번의 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중 한 공정이라도 게을리하거나 귀찮아 건너뛴다면 식구를 건사할 양식은 반으로 줄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 기본적 절차와 양식을 회복하고 직업윤리에 충실할 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이동범  
전 광주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존경받는 스승의 길

권위를 세우면서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세월호 침몰 당시 제자들을 끝까지 대피시키다 숨진 안산 단원고故남윤철 선생님과 “격정하지 마,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가라”라고 하신故 최혜정 선생님의 숭고한 제자 사랑과 교육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의 희생정신을 발휘한 점은 모든 교육자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의 정통적 가치를 추구한 우리 조상들은 스승을 일러 ‘군부 일체’라고 하였으며,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하는 숭고한 스승 존경의 풍토가 오늘날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이는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쯤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각급 학교의 학교차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학부모들 역시 학교나 선생님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에 선생님들은 교사의 직업이 성직(聖職)임을 알고, 오직 학생교육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선생님들 자신이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땀땀히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참된 스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품격과 자질과 소양을 갖추어 스승의 자리를 되찾는 일이 절실하다.

바로 교사는 고매한 비전을 높이 들고, 그가 맡은 어린 생명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학생의 잠재한 가능성을 개발하여 품요한 생활을 영위케하고, 이를 통하여 나라와 겨레와 인류의 발전을 돕는 길이라는 신념을 가진다면 분명 교육은 노동의 영역을 뛰어넘어 희열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 경우 하루의 일과는 부담이나 고통이 아니라 보람있는 성적이 될 것이다.

교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감을 가지고 학생교육에 헌신해야 한다. 정열과 충성을 다하여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능력있는 교사, 열정이 넘치는 교사, 자신이 개발한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동적인 과정 중심의 수업과 진행하는 수업에 달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부르면 대답하는 존재다. 진정

한 교육은 열과 성에서 이루어 진다. 교육은 훈과 훈의 대화요, 인격과 인격의 부딪침이요, 정성과 정성의 호흡이며 정열과 정열의 만남으로 학생들의 품성을 도야하는 ‘인성교육’에 정성을 다 바쳐야 한다.

교사의 임무는 단순한 직업이나 노동이 아니다. 비전과 헌신을 속성으로 하는 소명감에서 움직이지 않는 교육은 산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소명감이 있으면 교사는 산 스승이 될 수 있고 어린이의 영(靈)의 성장을 돕는 참된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사는 때때로 지 않고 청순한 어린 싹을 참되고 빠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는 직업임을 잊지 않고 스승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보람과 기쁨으로 사랑과 성찰의 중심에 자신을 둘 줄 알아야 한다. 세상 물정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학생들에게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어수선한 문화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을 빠르게 지켜주면서 교육자의 길을 땀땀이 걸어갈 때 존경받는 스승이 될 것이며 공교육은 살아 나고 학생들의 미래는 밝아올 것이라 믿는다.

無等鼓

중국 전한(前漢)시대의 유학자 동중서(董仲舒)는 제이설(災異說)을 주창했다. 동중서는 왕을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동중서는 이 같은 견해를 발전시켜 ‘왕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늘밖에 없으며, 하늘이 왕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 왕은 구언(求言)의 명을 내렸다. 구언이란 나라에 재앙이 있을 때 왕의 잘못에 대해 신하로부터 비판의 말을 구하는 것이다.

신하들도 적극적으로, 구언의 명이 떨어지면 “관리로서 직책을 가졌으니 종묘사직의 안전과 위험에 관한 일에 대하여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거늘, 더구나 이제 바른말을 구하는 말씀이 내렸으니 삼가 어리석은 총참으로 천총이 경고를 겹겹히 받아들이고 자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언(求言)

이에 따라 동중서는 “자연재해는 하늘이 왕에게 내리는 경고인 만큼 왕은 이 경고를 겹겹히 받아들이고 자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수나라에서 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조선헌조도 제이설을 받아들였다. 태종 15년 6월,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왕은 고기 반찬을 끊어내고 술을 끊었다. 스스로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다.

조선시대는 천문학이 발달해 일식이 나 월식 같은 현상이 자연의 법칙에 대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신하들은 상소 등을 통해 ‘왕이 부덕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근신하고 삼가야한다’는

잘못을 낱낱이 비판하곤 했다. 신하가 왕에게 근신을 요구하고, 왕은 신하의 입을 벌려 ‘자비 비판’을 하는 셈이다.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는 오리무중이다. 이런저런 자리에 서 사과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민의 가슴을 파고들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물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통령이 왕도 아니다. 하지만, 천재지변도 아니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음에도 구언을 명하는 대통령이나, 근신을 요구하는 부하들도 없다면 참으로 답답하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notice: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